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7.(화) 16:00
(지 면) 2026. 7. 8.(수) 조간

행정안전부, 유럽 폭염 사례 바탕으로 국내 시사점을 도출한다

- 최근 유럽 폭염 원인 분석 및 국내 시사점 도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7.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7일(화),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폭염 상황과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상·보건·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상청, 서울대 보건대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바로셀로나 자치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유럽의 폭염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와 국내 시사점을 집중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으로 몇 가지 취약성을 지적했다. 우선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기습 폭염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적응하고 사회 전반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지의 낮은 에어컨 보급률과 함께, 우리나라의 ‘무더위쉼터’와 같은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냉방시설 접근성이 떨어졌던 점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철도, 전력, 의료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들이 40℃ 이상의 고온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기준으로 설계·운영되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 극심했던 국내 폭염 상황을 계기로, 올해부터 기존 폭염특보 제도를 보완한 ‘폭염 중대경보’ 단계를 신설하여 선제적인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는 일최고기온 39℃(또는 일최고체감온도 38℃) 이상의 고온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르신, 쪽방촌 주민,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염은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재난”이라며,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폭염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